

# 올해 노동계·농민 '춘투' 심상치 않다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투쟁 선포식... 최저임금·고용 불안 등 성토 11월 총파업 예고 등 혼란 우려... 전농 광주전남연맹도 농민대회 열어 내년 대선 앞두고 현안 이슈 강경투쟁 조짐 속 노·정 긴장 고조 전망

광주·전남 노동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 대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산업재해·고용불안·소득 감소 등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모양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 존중'에 대한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대선까지 현안 이슈에 대한 노동계 목소리를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시일이 갈수록 노·정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지난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식'을 열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내년까지 노동 현안 이슈 관철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등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 노동자 생계 보장 및 노동법 전면개정, 노조탄압 및 비정규직 철폐, 부당산하기 환수 등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정, 산재사망사고 추모 리본을 달고 현수막을 사업장마다 게시하는 등 이달 집중적으로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월 한 달 매주 목요일 광주지역 곳곳을 돌며 최저임금제 개선을 비롯한 선전전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월별 현안 이슈를 선정, 내년 대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또 각 사업장을 돌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11월부터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문제

인 정부 때 추진된 노동 정책이 기대에 못미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대선을 위한이슈 선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월 근로자의 날을 중심으로 점화됐던 노동계 투쟁 시기가 빨라진 데는 겹겹이 쌓인 현안 이슈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당장, '2022년 최저임금' 심의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현 정부 동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020 대비 1.5% 인상)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의 입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농민회도 이날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농업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비판하고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전농측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절대농지(200ha) 유지, 농지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몰수,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때문"이라며 "비농업인도 자기의 농업경영 계획을 영농계획서 상으로 증명하면 누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자기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자격 책임도 면케 된다. 이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모든 대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청앞에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주최로 '2021년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 우즈베크 청년 3명 치어 사망했는데 음주운전자 항소심 형량 절반 줄어 합의 했었지만...관대한 처분 지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우즈베키스탄 청년 3명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숨진 외국인 피해자들의 송환 비용을 부담한 점, 피해자측 과실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가족 생계를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청년들의 '코리안 드림'을 깨트린 사고라는 점에서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일 새벽 4시50분께 순천시 대룡동 평화공원 앞길을 고속으로 달리다 앞서가던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탄 소형(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70km)를 넘긴 151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날 마신 술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속·음주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이후 벌점 초과로 무면허가 된 뒤에도 새 차를 구입해 150일 넘게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반영했던 사형 외에 피해자들 시신 송환 비용을 부담해 유족들이 모국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점,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잡았다. 또 외국인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 탑승인원 초과, 동승자 헬멧 미착용 등으로 사고가 확대된 점까지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자발찌 부착한 채 또 성범죄 광주동부경찰, 30대 긴급체포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31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동종 범죄로 9년 여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도중 발각돼 거주지 주변에 숨어있다가 전자발찌 위치추적으로 같은 날 오후 7시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십km 차량 스토킹에 여성운전자 공포 도움 호소했지만 경찰 무신경 대응 논란

### 남자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려보내...여성 항의의 글에 인터넷서 공분

번 바꿨지만 남성의 '차량 스토킹'은 무려 1시간 가량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A씨의 영상에는 파출소 앞에 까지 뒤쫓아와 차를 세우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파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여성을 따라오지 않았다'며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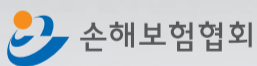
성에 대해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썼다. 해당 남성이 파출소 앞까지 여성을 따라와 정차한 이유를 묻거나 피해 여성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등 여성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여성 주장이다.

해당 커뮤니티를 중심을 경찰의 안일한 대응

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팀을 선정, 사실 파악에 나섰다. 다음날 다시 경찰서를 찾았을 때에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 남자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심정이 어찌겠냐, 본인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라"는 등 남성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여성의 글이 재차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의 무신경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파출소를 찾았을 당시 남성의 행동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확실하지 않는데다, 운전자의 신원이 확실해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관의 공감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최대한의 노력은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